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속을 위한 마을 정책 토론회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21. 3. 25. (목) 14:00~16: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시의회 204호)
- 공동주최·주관
 -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 나눔과더함 부평구사회적경제마을센터
 -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 연수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남동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실
 -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회
문제해결

마을공동체 지속가능하도록
사회적 가치 존중

마을활동의 가치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조사와 연구
선행

다양한 사회적
인정방식 개발
필요해

다양한 영역으로
마을활동 확장

언제

2021. 3. 25.(목)
오후2시~오후4시

어디서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별관 204호)

누가

마을활동가,
관심있는 시민 등

좌장) 이해경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발제) -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의 필요성과 방향

김정욱 (인천연구원 연구원)

- 사회적 인정 및 보상체계 구체적 정책 제시

김의욱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

토론) 임현진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소병순 (부평구 마을활동가)

김원진 (서구 마을활동가)

이근석 (사회적 협동조합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손민호 의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박재성 (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

주최 주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남동구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참여방법 : 현장참여(20명 이내), 줌(온라인)+유튜브 채널

문의 :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032-777-8200

진행순서

1부 **개회 및 참석자소개** 사회자:이혜경(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주제발표 1 발제자: 김정욱(인천 연구원)

- 마을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필요성 및 방향

주제발표 2 발제자: 김의욱(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 지역사회의 건강한 참여생태계를 위한 자원봉사 인정체계

2부 **토론 : 6명 / 각 7분**

- 임현진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마을정책)
- 소병순 (부평구 마을활동가)
- 김원진 (서구 마을활동가)
- 이근석 (사회적경제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사장)
-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 박재성 (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

토론 및 질의 응답

폐회

목 차

I. 주제발표

마을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필요성 및 방향

김정욱(인천 연구원)

지역사회의 건강한 참여생태계를 위한 자원봉사 인정체계

김의욱(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II. 토론문

마을공동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인정 제도

임현진(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마을정책)

“마을활동가는 필요할 때만 사용되는 일회용이 아니다!”

소병순(부평구마을활동가)

더 나은 세상은 사람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이다

김원진(서구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완주의 사례

이근석(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사장)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손민호(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박재성(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

[발제 1]

마을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필요성 및 방향

김정욱(인천 연구원)

[발제 2]

지역사회의 건강한 참여생태계를 위한 자원봉사 인정체계

김의욱(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발제문]

마을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 필요성 및 방향

김정욱 연구위원, PhD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1. 필요성

가. 마을공동체 영역의 확장

1) 마을공동체 활동

가)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시간과 노력, 재능과 전문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문화와 관광, 도시환경 정비 등의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의 제발굴 등에 기여하고 있음.

나) 마을공동체나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관계 및 사회적자본의 형성, 공동체 및 소속감 향상, 삶의 질 제고에 기여

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수익 창출 등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은 아님. > 인정 및 보상체계 설계시 고려 필요

나. 공공부문의 마을단위 정책추진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역할의 확장

1) 주민들의 시간과 노력, 재능과 전문성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 공익을 증진하는 공공부문의 공공사업에 참여

2) 마을공동체 활동가나 마을공동체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시재생, 주민자치회, 지역돌봄, 사회적경제 분야의 민관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3) 마을공동체 활동의 전문성

가) 마을공동체를 통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주민주도 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

(1) 마을공동체나 활동가의 활동경력을 전문성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

- (2) 위탁사업을 추진하거나 활동가들을 채용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

다. 마을활동의 인정·보상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 1)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시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시간과 노력, 재능과 전문성 등을 고려
- 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문성 인정 및 물리적 보상 등을 다루고 있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2. 사회적 인정체계의 부재로 인한 문제

가. 마을공동체나 주민조직, 시민사회에서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체계가 없음.

- (1)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4대 보험을 기준으로 전문성이나 경험을 경력으로 산정하여 인건비를 제공
- (2) 그러나 마을공동체, 주민조직, 시민사회 활동은 기업이나 정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4대 보험을 제공하거나 4대 보험을 통해 경력을 증명하고 있지 않음.

나.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사업비만을 제공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은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자비로 충당하고 있음.

- (1)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의 활동에 마을공동체 활동가는 노력, 시간, 재능, 전문기술과 지식 등을 제공함.
- (2) 마을공동체 활동가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역돌봄과 도시재생 등 공공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마을공동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동기 요인을 고려

- (1) 사회적 인정체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근거하여 제도 마련 필요

3. 방향

가. 마을공동체나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마을단위 사업, 민관협력 사업, 주민주도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공공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

나. 마을공동체, 주민조직, 시민사회 활동의 특성이나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 요인을 고려

- 1)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경력과 전문성, 노력과 시간, 지식과 기술 등을 적절하게 인정 필요
- 2)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로서의 마을공동체 활동가¹⁾로서의 역할 인식 및 인정
- 3) 마을공동체 활동을 공익증진활동 경력으로 인정
- 4) 공익사업이나 민관협력사업에 할애되는 시간, 노력, 전문성 등에 대한 인건비 보상: 사업비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포괄보조금 등 제공 고려 필요
- 5)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시간과 노력, 재능과 전문성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운영비 제공: 사업비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포괄보조금 등 제공 고려 필요
- 6) 교육연수 등을 인정하거나 제공 등

1) 영국의 Community Development Worker는 영국직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 직업으로서 초봉 16,000 파운드, 경력자 36,000파운드의 임금을 제공받음(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20). Community Development Worker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

[발제문]

지역사회의 건강한 참여생태계를 위한 자원봉사 인정체계

김의욱(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1.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생태계 구성

자원봉사, 마을활동과 같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구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범주로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일에 관여하는 활동에서부터, 동아리 모임이나 공동체적으로 관여하는 것, 행정이나 정책, 제도적인 과제에 참여하는 것 등을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단순화해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 1)自助活動: 개인의(Private) 살림살이와 관련되어진 활동(학습활동참여, 생애변화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 2)協助活動: 타인과 협력해서 공동의(Common) 과제를 수행하는 동아리, 소그룹활동, 봉사단체 운영, 부모모임, 단체활동
- 3)公助活動: 공공적 수준(Public)에 관련된 활동으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자원봉사 캠프, 동복지협의체, 참여예산사업, 주민자치회 등

이 각각의 범주가 가진 특성에 따라서 활동하는 방식이 다르며, 참가자들의 욕구와 기대도 다를 것이다. 또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운영과 관리의 방식도 다르다. 특히 3번의 지역사회 공공의 과제와 관련된 활동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활동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성과에 대해서 보상하는 적절한 방식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의 지원과 개입방식이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 활동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역사회 참여 생태계 변화사

지역사회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동기와, 지역사회의 요구, 기대되는 성과 등은 시대적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내용은 주민들의 생각과 무의식에 축적되어 있어서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동네의 어떤 일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내 안에서도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참여에 대한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개인화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개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해지고, 개별화 되고 있는 개인주의의 변화에 맞추어서 주민참여 방식의 변화를 해석해 보자.

-국가만들기 시대: 지역공동체에 속박된 순수한 지역민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모든

주민은 개인으로서 동등한 국민이 되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공공의 질서와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참여를 당연한 도리로서 인식하게 된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시간과 물자를 제공해서 공동체의 위기를 이겨내야 개인의 생존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연한 도리로서 참여가 권장되고, 칭송되었다. 정부는 참여한 주민들에게 명예와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 만들기 시대: 국가의 민주화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관심사와 이슈가 다양하게 제기되었고, 국민들은 자신의 가치와 의미, 관심사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신념에 따라서 참여방식도 분화, 확장되었다. 참여의 동기는 뜻과 의미, 가치를 중심으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이렇듯 참여동기가 분화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방식도 다각화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정부의 권위에 의한 표창, 훈장과 같은 방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 마일리지와 같은 각각의 영역이나 이슈에 따라 다른 방식이 요구된 것이다.

-개인의 시대: 개인화가 심화되면서, 소속과 집단성은 약화되었으며, 새로운 연결방식이 전면에 등장했다. 개인들의 공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동기와 욕구도 개별화 되었으며, 특정한 방식의 인정과 보상체계가 보편적이지 않게 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공적자금에 기반한 활동지원 방식, 보편적인 인정체계가 개인들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들간의 관계방식의 변화상이 자원봉사와 관련한 정책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시대구분	시민참여의 특성	자원봉사 정책환경
국가 만들기 (1960-90)	평등한 개인의 선거참여(동등한 한표) 道理로서의 국민의 역할수행 국민국가건설/민주주의실현 소속된 집단에 의한 참여	공공의 대표성과 권위에 의한 공식화 -비제도적, 조직/단체중심 민간영역은 복지/자선사업 중심
시민사회 만들기 (1990-2010)	가치지향과 정체성, 이슈 중심의 참여 활동분야/주제의 성격(意理)에 따른 다양한 참여방식 차이와 다양성 증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제도적 관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지원조례 다양한 인정과 보상 방식 -실비지급, 마일리지, 표창 지원사업, 공모사업의 확대
개인으로 살기 (2010-)	개인적 관심사에 따른 참여 이해당사자성 심화(實理로서의 참여) 단절, 무관심, 배제, 차별 느슨한 연결/비조직화된 참여 구체적 개별적 성과중심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다각적인 지원 방식의 시도 민간영역에서의 칸막이 문제 경제적 비용지원과 관련한 이슈 개인적, 개별적인 활동연계

3. 지역사회 참여/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중요성

1)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 다각화 되고 있다.

사회적 인정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매슬로우의 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는 위계를 가지고 있다.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 경제의 욕구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본다. 그 기본위에서 다른 욕구가 점차 발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가 해소되면 점차 고차원의 욕구, 자

기실현의 욕구로 성장 발달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방식은 지금의 개인화, 개별화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경로, 성장의 방향은 개별 주민들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욕구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욕구는 그 자체로 고유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고려해볼 때 윌리엄 글래스라는 심리학자의 욕구이해가 보다 실질적이라고 보여 진다. 그는 사람들이 가진 각각의 욕구를 수평적으로 펼쳐놓았다. 생존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성취와 명예의 욕구, 자유의 욕구, 재미의 욕구 등 각각의 욕구는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과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식도 각각의 욕구에 따라 다르게 개발되어야 한다. 명예의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반면 생계를 위한 수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비용지급이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요즘의 자원봉사 활동선택에서 재미와 의미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자원봉사에 참여한 동기에서 '①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②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③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 '④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3년전 조사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첫 번째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선택되었었는데, 지난해의 조사에서는 개인의 욕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듯 개인의 욕구와 자기성장에 대한 관심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즘 마음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2)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을 SDGs로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유력한 해법으로 전 지구적인 자원봉사 운동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기후위기, 빈곤심화, 교육격차, 공동체 붕괴, 고령화 등의 현안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연결되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통의 문제들은 복합적이며,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단순한 노력봉사나, 일시적인 참여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해결방법들과 융합되고, 우리의 삶의 양식과 문화를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각 지방정부에서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과제의 수행을 위한 다양한 중간조직과 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3) 당사자의 성장, 참여의 성과관리, 참여의 지속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변화하고 있는 개인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고, 사회적인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자원봉사 생태계는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의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급자의 관점에서 쉽게 모색하게 되는 인정제도, 보상제도, 격려와 지원 등의 실행수단에 대해서는 세심한 평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필요한 인력활용을 위해서 활동비용을 지급할 경우나, 자원봉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표창하는 등의 행정이 가진 자원과 권위가 사용될 때 중간지원조직, 행정, 공급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습관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방식은 지역사회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며, 무의식적으로 주민들 안에서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4. 논의가 필요한 것들

1)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은 무엇이며, 인정의 주체는 누구인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을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활동이 가진 가치, 활동의 투입량, 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공식화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다양한 범주(自助, 協助, 公助)에 따라서 그 활동을 인정하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학습활동 참여 등은 학습계좌제나 평생학습 이력제, 혹은 개인의 포트폴리오로 기록될 수 있다. 공동체에 관여하는 활동은 상호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축하와 감사로 표현될 것이다. 나아가 공식적이거나 제도적인 활동은 자원봉사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공공의 과제와 관련된 활동의 비중이 커지면서, 공식적인 인정의 통로가 행정이나 공공기관의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활동에 소요되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과 결합되면서 활동의 가치와 의미, 성과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공식화의 과정이 행정에 지나치게 의존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다 존중되고, 그 의미와 가치가 지역사회 안에서 상호 인정되는 그런 토대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영역에 의한 평가에 과도하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자원봉사에 대한 비용지급

활동을 위해 봉사자에게 실비(식비 및 교통비용 등)를 제공하거나, 전일제 활동을 하는 활동가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 등은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노동력 제공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활동의 지속과 재생산을 위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비용지급 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예를 들어 수입이 없는 청년이나, 노년층의 자원봉사를 위해서 활동비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 혹은 열정 페이가 아니라, 공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또한 유급활동가가 담당해야 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자원봉사와 구분되는 역할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실비지급, 활동비지급 등은 활동에 대한 보상, 혹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관점과 구분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적 서비스의 생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의 청년봉사단(AmeriCorps)의 경우를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활동의 관련된 전문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유급 봉사단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는 봉사단이 그 과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선발되어 활동하는 단원들에게 활동비용을 지급하여,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 경우 엄격하고 객관적인 성과의 평가가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해소하고 있다.

이렇듯, 활동비용 지급은 유연하게 적용하되, 비용지급과 관련한 객관성의 강화가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활동비용이 갖는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활동비는 점차 고용에 의한 임금, 열정페이와 구분되지 않게 되고, 이후 활동가의 처우, 소속, 계약관계 등 많은 문제로 연결되어

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3) 자원봉사 성과에 대한 보상방안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Civic service)은 타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즉 활동으로 일어난 성과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방식은 모든 자원봉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서비스영역에 한정해서, 그 서비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과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5. 다양하고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다양해진 개인들의 욕구를 존중하고, 복잡해진 사회적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매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즉 주민참여를 당위적으로 접근하거나, 공공의 가치를 전면내세우는 접근법은 개별화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손쉬운 방식으로 경제적 지원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한 욕구만 키우게 되며, 결과적으로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확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원봉사가 갖는 매력이 잘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인정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접근법을 시도해야 한다.

첫째, 자원봉사가 개인에게 되돌려 주는 의미와 재미를 브랜드화하는 것이다. 생애변화의 과정에서 개인에게 절실한 자기성장과 자기실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서 자원봉사는 매력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공식적인 역할, 새로운 배역을 갖게 된다는 것은 등장인물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청년, 장년, 은퇴자 등 다양한 세대별 참여욕구, 성장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 50+ 등의 학습인프라와, 자원봉사를 통한 역할 갖기는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참여의 명석을 깔아주는 플랫폼 방식의 참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지구적인 공통의 과제가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활동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가 함께 추구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자원과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타임뱅크와 같은 지역중심의 활동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기여를 구체적인 성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확인되는 성과는 참여자들의 주도성을 강화시키는 토대로서 다시 순환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련기관의 전문적 운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의 분절화만큼, 민간영역의 관련기관의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다. 각 기관의 기능이 분절화되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함께 성장하고,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과제해결에 이르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사업수행능력을 키우는 일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토론 1]

- 마을공동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인정 제도
-

임현진(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마을정책)

[토론 2]

- “마을활동가는 필요할 때만 사용되는 일회용이 아니다!”
-

소병순(부평구마을활동가)

[토론 3]

- 더 나은 세상은 사람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이다
-

김원진(서구마을활동가)

[토론 4]

-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완주의 사례
-

이근석(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사장)

[토론 5]

-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손민호(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토론 6]

-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박재성(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

[토론문]

마을공동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인정 제도

임현진(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마을정책)

2020년 7월 함박마을 상가번영회 4명이 5천여 명에 달하는 미등록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스크와 감염예방물품을 나눠주고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마을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역사회 마을사람들은 왜 이런 활동을 하는가? 함박마을이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고 동참을 이끌어낸 일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함박마을에서 실현한 공동체적 가치를 인정하는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의 863개 공동체(13~20년 공모사업참여), 155개의 주민자치회(위원회) 주민주도조직이나 협의체, 함박마을과 같이 공모사업에 참여하지않은 공동체와 함께 시민들은 자율적이고, 역동적으로 마을공동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공동체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천시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참여자수가 6879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책이다. 마을 공동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시민들의 유·무형의 노력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2020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와 5개 군·구 기초중간지원조직 센터장협의회에서 7대 마을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첫 번째로 <마을공동체 지속을 위한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그에 앞서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인식조사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마을활동가는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일상과 이웃, 주변 환경과 함께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다양하고 무수한 마을활동으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물론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가 모두를 포함한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가치에 기반한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인식>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1.3.15~20
- 조사대상: 원도심, 아파트신도시, 농촌(섬), 청년 등 마을활동가 총 65명(응답률 84.6%)
5개 기초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추천 15명 포함.
- 조사방법: 전화로 설문 참여 동의 구한 후 온라인조사
- 조사내용: 활동이력, 사회적가치와 인정 만족도와 중요도, 사회적 인정체계 및 지원방안

° 마을 활동은 주로 여성이, 40~50대 연령층, 활동기간은 5년 이상, 이하 고루

- 활동가는 여성이 37명(67.2%)으로 남성 18명보다 많고, 활동 연령층은 40~50대(70.4%) 가장 많고,

마을활동 기간은 5년 이상 28명(49.1%), 1~5년 27명(47.3%) 정도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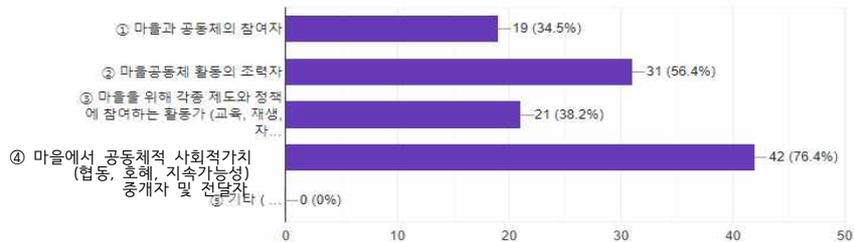
◦ **생활세계의 마을 현장이 방대하고 복합적, 다층적이어서 역동적이고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활동함.**

- 노령화로 소멸위기의 고향마을에 청·장년 인구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과 인프라구축
- 생활문화, 마을미디어, 돌봄과 품앗이, 도서관 마을교육, 텃밭과 나눔, 마을 안전과 환경 개선
- 사회적경제 중심의 농촌마을재생, 소상공인들과 협업 조성, 도시재생사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소득 작물 공동 재배활동
- 마을커뮤니티센터, 마을 공방, 공유·유희공간 활용 공동체, 마을농장 체험학습과 축제, 도시농업과 먹거리, 생태 체험 및 환경교육, 50년대 주인선철길이야기 발굴 및 이야기 만들기, 지역역사 문화학교
- 주민자치회 기반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컨설팅, 자치/공동체 모니터링

◦ **마을활동가의 역할은 공동체 활동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적 사회적 가치 (협동, 호혜, 지속가능성 등) 중개자 및 전달자’**

- 활동가는 마을의 일에 참여(34.5%)하고 도우면서(56.4%) 마을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는 지역사회 주체로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관계 맺게 하여 호혜, 협동,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76.4%)을 함.

[마을활동가의 역할]



◦ **마을공동체를 지속하는 동력은 존중과 호혜의 신뢰 관계 형성과 확대**

- 마을공동체를 지속(92.7%)하게 하는 힘은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신뢰 관계가 싹트고(63.6%), 지역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58.2%)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
- 마을공동체가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39.6%)과 공동체 비전의 부재로 지속할 수 있는 동력(37.7%)을 잃어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판단.
- 공동체가 지속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공동체 유지· 운영비 부족, 경제적 생활 불안정으로 활동 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마을 현장에 맞는 중· 장기적인 비전과 단계별 방향 설정 등을 만들어 가면서 마을의 흐름과 환경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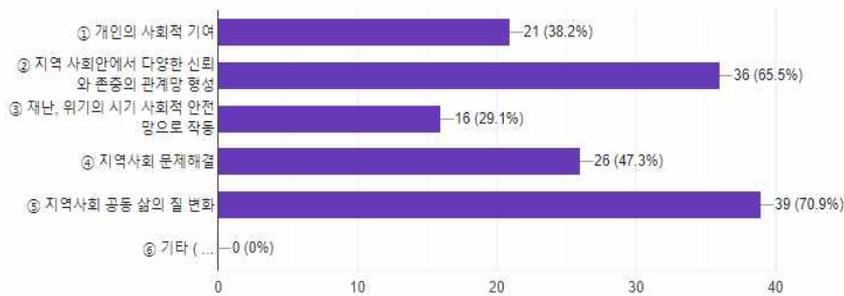
[공동체 활동 지속하거나 지속하지 못하는 요인]

공동체 활동 지속 동력	구분	응답률	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	구분	응답률
	개인적 성장, 자긍심	38.2%		공동체의 변화 (비전, 동력상실)	37.7%
신뢰관계 형성, 확대	63.6%	활동가,단체 갈등	13.2%		
지역애착과 정주의식	38.2%	경제적 어려움 (생활의 불안정)	39.6%		
지역문제 해결,변화	58.2%	행정절차상어려움	5.7%		
기타	9.1%	기타	3.8%		

◦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공동 삶의 질을 드높이는 사회적 가치가 큼.**

-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공동 삶의 질을 변화(70.9%)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신뢰와 존중의 관계망 형성(65.5%), 지역의 의제와 현안들을 해결해나가는 것(47.3%)으로 공동체적 가치가 있다고 봄.
-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지역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성 확산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마을활동의 사회적 가치]



◦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받는 사회적 인정 만족도 크나, 제도적 인정은 작아**

- 공동체 참여로 얻는 성취감과 공동체 구성원간 활동에 대한 인정과 만족도는 큰 편임.
- 공동체 활동 경험, 재능이 경력으로, 사회적 일자리 지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사회적 인정에 대한 만족도]

구분	응답률		
	만족	보통	불만족
공동체 구성원간 활동가 인정	54.6	30.9	14.5
공동체 발전에 기여로 얻는 성취감	65.5	30.9	3.6
활동으로 사회적자산(관계망) 축적	49	34.5	14.5
지속적인 활동가 역량 강화	40.1	43.6	16.3
활동경험,전문성 제도적 경력 인정	18	32.7	49.3
사회적 일자리로 지위 인정	9	29.2	61.8

0% ■ 만족 ■ 보통 ■ 불만족 100%

◦ **공동체 내· 외부의 사회적 인정의 중요도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

- 공동체 참여에 대한 성취, 사회적 관계망 축적, 활동 인정 및 역량 강화에 대한 공동체 스스로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정적· 제도적인 인정에 대한 중요성을 고르게 판단함. 행정 의존이나 외적 평가와 인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주체로서 균형적으로 인식함.

[사회적 인정에 대한 중요도]

구분	응답률		
	중요	보통	중요하지않음
공동체 구성원간 활동가 인정	56.7	27	16.3
공동체 발전에 기여로 얻는 성취감	63.6	30.9	5.5
활동으로 사회적자산(관계망) 축적	56.3	30.9	12.8
지속적인 활동가 역량 강화	61	29	10
활동경험,전문성 제도적 경력 인정	34.5	27	38.5
사회적 일자리로 지위 인정	51	23.6	25.4

0% ■ 중요 ■ 보통 ■ 중요하지않음 100%

° **지역사회에서 싹트고 성장한 유·무형의 공동체 가치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

- 다원화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지역 사회 자산으로 인정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청됨.
- 지역별로 활동가 네트워크와 소통, 공론과 숙의, 협업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시민 공유공간의 마련.
- 표준화된 교육 기획과 맞춤형 설계, 선진지 연수와 세미나와 같은 다각적 교육지원, 네트워크 지속과 참여 촉진, 공론장 운영과 공동체의 순환, 지원 협력체계와 사회적 일자리 마련 등 지역 현장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요청.
- 지역공동체 기반한 사회적 가치 마을의 공동체 역량으로 환원, 축적되도록 지원 필요.

[사회적 인정 체계에 대한 다양한 상상]

	구분	사회적 인정
공동체 가치	보충성의 원리	·다원화된 지역 문제해결 주체는 지역사회 자산으로 인식 확산 ·응원하고 지지하는 보상체계(대가성 형태 임금 및 직급지양) ·시민의 사회참여 권리인정과 기회마련
	공간	·소통과 네트워크 위한 광역, 기초 군·구 단위 시민협업 공간
	교육	·표준화된 교육, 맞춤형 학습 과정 지원 ·다각적 역량강화활동 지원 (선진지 견학과 연수, 세미나) ·공동체 역량 지역사회 내 순환, 축적되도록 보조금 재조정 ·마을공동체 범위 내 마을교육자로 인정, 역량 축적
기반한	네트워크	·지속적인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참여자 확장	·다양한 계층(예:청년) 공동체 참여 촉진방안, 제도적 장치
	공론장	·마을 활동 현장의 필요와 소통, 정책 제안 논의의 장 마련
사회적 인정	공동체의 순환	·공동체 활동 경험 이력인정 (인정지표마련) ·경험의 지역 내·외 환원과 전문역량으로 연결 ·활동 포인트화해 혜택이 순환되는 구조
	협력체계	·민·관 공동학습, 공동체의 이해 인식 변화와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일자리	·활동 지속을 위한 최저임금보상 ·관계망 유지위해 경제적 장애없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봉사, 재능 기부 아닌 마을활동에 맞는 보수 지원 ·마을 활동, 사업실행에 맞는 기본 활동비 지원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1. 보조금 지원제도의 실질적인 재개편으로 자립 기반 조성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마을 현장에 수요와 필요, 준비에 따라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실험하고 시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경쟁적 보조금 지원방식 지양과 예산 확충²⁾ 및 마을기금으로 참여의 기회 확대
- 자발적이고 유연하고 실험적으로 실행가능한 다각적 시민제안 사업 발굴
- 공모사업 예산 외 사업주민자원 인정³⁾(기획, 진행, 홍보, 소통 등 시간, 노력) 및 보상
- 보조금 활동비 15%에서 30%로 확대
- 보조금 사업의 시기와 범위, 공모사업 외 지원책(시민혁신공간, 선진지연수 등) 다양화

2. 마을공동체 지역현장 생활세계에 가닿을 수 있는 일관된 행정지원체계 마련

- 공동체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 자원화, 활용이 아닌 동등한 협력 파트너십 발휘
- 마을공동체경험이 지역사회 주민자치로 연결, 확장하는 융합적 지원

3. 지역사회의 변화와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조사·연구로 단계적 인정 방안 모색

-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활용실태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의 정책적 인정. 그에 따른 바람직한 인정기준에 대한 연구로 실현가능한 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마을공동체 공감대 확산을 통한 상호존중과 호혜, 신뢰의 공동체 가치 기반한 사회적 인정 제도와 융·복합 지원체계 마련

마을에서 시작한 풀뿌리, 자치, 참여의 경험으로 형성된 신뢰에 기반한 마을공동체적 삶의 모든 것이 실은 공통의 관심사이며, 지역사회의 큰 변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공공의 영역인 것이다. 행정에서도 미처가 닿지 않았던 공동과제와 일들을 새롭게 실험하고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인정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인천시 제2기마을공동체만들기기본계획(2021), 공모사업238단체 예산 6.0억원, 대전시 231단체 17.0억원(2019년)

3) 안현찬,조운정(2020) 서울시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 정책리포트, '마을공동체 사업에 투입된 주민자원 경제적 가치는 보조금의 두 배. 강북구 평균 보조금 1,139만원 주민자원 2,434만원으로 보조금 의존도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 재고 필요,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는 수치'

[토론문]

“마을활동가는 필요할 때만 사용되는 일회용이 아니다!”

소병순 (인천시 부평구 마을활동가)

I. 마을활동을 시작하며

벌써 5년이 지난 것으로 기억된다.

현장에서 벗어나 마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마을공동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인천마을 공동체를 검색하던 일이 엇그제 같다.

처음 어리버리하게 인천마을세터의 교육장을 들어서면서 시작된 본격적인 공동체 관련 활동은 매년 조금씩 변화되고 폭이 넓어지게 되어 오늘은 이런 토론회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II. 마을활동가 교육 그리고 느낌

나는 현재 부평신촌의 주택지역에서 36년을 넘게 살고 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씩 접목’ 시키고,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 가던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공동체 활동의 일환 이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마을활동가’ 교육을 받고 ‘위촉’을 받아 실제로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동체 활동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이런 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1.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고
2. 공동체 활동의 ‘리더의 꿈이 곧 공동체의 희망’
3. 공동체 활동의 중요한 점은 “구성원의 인간관계”
4. 공동체 활동의 원활함은 “자금조달 방법”
5.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은 “활동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
6. 공동체 활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공동체를 존재케 하는 이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공동체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곳은 그리 흔치 않다. 대부분 공동체의 시작은

1. 지자체의 공동체 공모 사업을 보고
2. 아니면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시작하거나

3. 공모사업 전문가들의 사업계획으로 지원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동체지원팀들은 서류 정리도 서툰고 사업 진행에 대한 계획서도 방만하게 작성되기 일쑤고, 더욱 정산에서는 더욱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Ⅲ.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고민

자!!

여기서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이 어떻게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

1. 행정이 생각하는 마을활동가 - 업무처리의 수단
2. 공동체가 생각하는 마을활동가 - 공동체 활동의 점검자
3. 마을활동가가 생각하는 마을활동가 - 전문성을 지닌 조력자
4.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마을활동가 -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입지를 가진 마을활동가에 대한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지역사회 행사에서 좌석을 배치할 때 어떤 순으로 배치하는가?
앞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인정이 되는 중요한 순서로 배치한다.

여기서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정이 어느 정도인가?

우선,

■ 우리지역에서 마을활동가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1. 매년 지원신청서를 내고
2. 행정가들 또는 일부 활동가들로 조합된 면접위원의 면접을 통해서
3. 공모사업과 거의 비슷한 활동기간에
4. 행정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일을 하도록 선발

“마을활동가는 필요할 때만 사용되는 일회용이 아니다.”

■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1. 원도심 지역의 개발제외지역
2. 저층공동주택의 주민공동이용시설
3. 고층공동주택의 연합체를 중심

“공동체 활동은 원도심,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에서 활발”

■ 원도심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들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1.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심
2. 활동가가 외부 투입되어 공동체가 활성화된 지역이 주민들
3.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
4. 지역에서 애착을 갖고 삶의 터전으로 마련하고 하는 분들

“공동체 활동이 합리적인 운영보다는 리더의 생각 또는 지역이기주의”

자, 그럼 마을공동체의 분석을 해보면

1. 왜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2. 사회적 기반이 잘된 곳은 왜 공동체가 활발하지 않은가?
3.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자금조달을 할까?
4.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이 행정의 실적이거나 사업 진행의 수단인가?
5. 마을활동가들의 용어 정의 및 사회적가치인정에 관한 사항이 법적,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가?

다양한 이유로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1. 젊은이들이 참여할 조건을 만들어 주자
 - 가. 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보상 필요
 - 나. 젊은이들의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접목
 - 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새로운 삶의 보람이 되는 일터
2. 공동체 활동이 보람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가치가 있는 일
 - 가.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
 - 나. 기업의 입장에서 공동체 활동 이력에 가산점
 - 다.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시험에서 공동체 활동 인정
3. 공동체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해

- 가. 사회적경제 접목을 위한 전문가 지원
 - 나.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공동체 공공자금 지원
 - 다. 공동체 사업을 통한 클라우드 펀딩
4. 주민자치회를 이용 마을공동체 활동내용이 지역 공공의 이익과 접목할 수 있는 활동여건 조성
- 가. 지역사업을 공동체를 통하여 수행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도모
 - 나.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기회
 - 다. 공무원들이 지역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라. 공동체를 통하여 마을의제 수립 시행
5. 법적 제도화를 통하여 마을활동가 사회적인정체계를 마련
- 가. 법적제도화를 통해 마을활동가들을 공무의 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존중
 - 나. 활동가들의 입지 확립을 통하여 자긍심을 갖고 활동
 - 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마을공동체 마련
6. 공모사업 예산 사용 계획 회계기준이 제각각
- 가. 2020 공공미술사업 프로젝트의 경우 인건비성 경비 허용
 - 나. 2021 인천광역시 천개의 오아시스 사업 출연료 50% 허용
 - 다. 2021 부평구 마을공동체 강사료 가능, 활동비 지원 불가

IV.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

마을공동체와 마을활동가들이 침체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은

1. 젊은이들이 참여할 조건을 만들어 주자
2. 공동체 활동이 보람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가치 있는 정책마련을 통한 재원 조달
3. 주민자치회를 이용 마을공동체 활동내용이 지역 공공의 이익과 접목할 수 있는 활동여건 조성
4. 법적 제도화를 통하여 마을활동가 사회적인정체계를 마련
5. 공공사업 참여 절차의 간소화와 예산 사용 기준의 표준화

“ 마을활동가는 마을공동체의 꽃이다.”

[토론 참고자료]

지원 마을활동가의 눈을 통해 본 **마을공동체에 대한 바람직한 인정**

I, 들어가며

마을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입장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새롭고 합리적인 마을공동체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하여 이 일과 관련된 마을활동가들과 공동체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문제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요건 :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시 또는 군·구 마을활동가 경력자로서 공공기관, 단체,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교육 이수자

구분	지급기준	비고
컨설팅비	■ 1시간 50,000원, 초과 30,000원 * 최대 80,000원	
상담비	■ 시간당 20,000원, 일지 건당 10,000원 * 최대 50,000원	
회의비	■ 건당 20,000원	
강사비	■ 1시간 100,000원 / 초과 50,000원	

위는 인천광역시에서 2021년 1월 커뮤니티 전문가 모집 공고의 응시자격과 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시 또는 군·구의 마을활동가 경력자로서 공공기관, 단체,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교육 이수자’라는 요건은 과연 객관적인 커뮤니티 전문가로서 자격을 가지는 것일까? 그리고 지급기준 또한 합리적인 방법일까? 라는 의문을 갖는다.

[부평구의 2021년 1월 마을활동가 모집 공고의 자격 요건과 활동비 지급 기준]

선발대상		자격요건
마을활동가	1년차 (신규)	1. 2019년 마을활동가 양성 과정(초·중·고급) 모두 수료자 또는 2. 2020년 마을활동가 양성과정(12주과정) 모두 수료자
	2년차	부평구 마을활동가 선발 유경험자
마을활동컨설턴트		부평구 마을갈등조정단 또는 부평구 마을활동가 선발 유경험자

구분	마을활동가 1년차(신규)	마을활동가 2년차 이상	마을활동컨설턴트
지원규모	건별 (2시간기준) 3만원 (월 최대 20건)	건별 (2시간기준) 5만원 (월 최대 12건)	건별 (2시간기준) 5만원 (월 최대 12건)
활동내용	- 마을공동체 행사 및 교육지원 - 월례 회의 참석 및 활동일지 작성 - 필요시 <u>2년차 활동가의 활동 보조</u>	- 마을공동체 행사 및 교육 기획·추진 - 마을공동체 회계정산 업무 지원 - 월례회의 참석 및 활동일지 작성 - 권역별 네트워크 지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공동체 컨설팅 및 지원 - 월례회의추진 및 행정지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행사 및 교육지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회계정산 업무 지원
선정인원	4명	4명	2명

위의 두 사례의 차이는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이다.

이처럼 시와 지구단위지원조직간에 적용하는 조건과 기준이 다른 것을 합리적인 조건과 교육의 내용 그리고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II, 사회적가치와 인정에 대한 대안

1. 마을활동가 입지의 중요성

마을활동가가 가지고 있는 입지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물론 운영진들과 함께 호흡하며 공동체의 목표 도달을 위한 동반자로 참여하면서, 모든 의사 결정은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공동체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가. 마을활동가는 공동체를 움직이는 동반 조력자
- 나. 마을활동가는 관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매개자
- 다. 마을활동가는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연결자

2. 마을활동가 조직 구조와 운영 기준의 다름

마을활동가들의 조직 구조가 지역단위 또는 중간지원조직 단위로 저마다 다른 형태로 되어 있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저마다 다르고 방법 또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서 있지 못하다.

- 가. 시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조직 구성
- 나. 중간지원조직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활동 방법
- 다. 마을활동가 양성의 기준과 방법이 다름
- 라. 활동가 조직의 네트워크 미진
- 마. 활동가 인력풀 운영 필요
- 바. 활동가와 중간지원조직과 협업을 통해 공동체 지원 필요
- 사. 마을활동가 활용 방안 확산
 - 양성과정
 - 활동가 선발과정
 - 공동체 중간점검 방문
- 아. 활동가 코워크 필요 - 공동체 사례 공유 등으로 합동전략 추진

3. 마을활동가 양성 방법의 표준화 필요

”왜 사람들이 마을활동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가?“

마을활동가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무원들과
의회 의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해서
부평구가 활동비 지급기준 등을 위하여 처음으로 양성과정을 시작하였으나,
그것으로 부족하니 역량강화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기관과 양성과정이
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체계화된 교육과정, 전문기관 등을 통한 전문성 있는 활동가 양성은 필수 조건이다.
인천광역시 또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육성한 마을활동가 수는 통계상 수치와 실제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수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실제로 활동가를 육성한 기본 목표와는 다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마을활동가를 양성할 때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기간과 과목 등 교육과정을 운영할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가. 양성교육 기관 지정 운영
- 나. 양성교육 과정이 표준화 제정
- 다. 마을활동가 인증제 운영
- 라. 각 지역에서 추천받은 활동가들을 교육·육성시켜 활용하는 방안

예시) 부평구 :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추진 → 마을활동가 배출 → 마을활동가 활용
운영 3년차 - 현재 마을활동가 9명 위촉
신규공동체 중심 활동 지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 활동 등

4. 마을활동가 보상제 필요

”전문과정을 통해 양성된 활동가들의 임금체계 현실화가 필요”

활동가들의 사기 진작 및 활동 인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이 필요 [금전적인 측면과 가치적인 측면]

- 가. 활동기간 보장제 - 최소 3~5년 활동 보장 필요
- 나. 활동가 인증제를 통한 서류심사로 선발
- 다. 활동가 선발 심사위원 참여
- 라. 마을공동체 선발의 심사위원
- 마. 활동시간과 경력에 따른 적정 보상제

예시) 커뮤니티전문가 : 시 선발, 활동은 개별,
- 시에서 선발한 활동가로 중간지원조직의 도움이 없이 개별적 활동 실적으로 수당지급 : 합리적 업무지침 미비
- 수당 지급을 단순 활동의 수치화 계량화를 통해 지급
일의 성격에 따라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결과도 다른 상황 노력한 만큼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필요
[프로젝트 완성에 따른 성과별 일괄지급 방식, 활동 시간, 횟수, 건별 지급, 카톡 메일 등 다양한 상황 인정 수당 지급]
- 인천시가 담당하는 행정지역에 따라 선발하고 중간지원조직

- 과 협력하여 운영하면 좋은데,
-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지역 배정으로 활동할 경우
- 사는 곳과 거리가 먼 경우 별도의 출장 수당 등의 보상 미비
-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대상 공동체와 손쉽게 접근할 중간지원
- 조직과의 소통 부재로 업무를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상과 같은 어려움으로 선발되고도 활동을 하지 못하는 활동가들이 발생
이는 활동가들에 대한 보상과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상당부
문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5. 마을활동가 명칭의 용어 정의 필요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상당수는 마을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여 실제로 공동
체와 더불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마을활동가들의 위상이 약화되고 의미도 퇴색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각 분야와 활동의 특성에 따라 그 명칭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가. 마을활동가-마을지원활동가 마을활동컨설턴트
- 나. 마을학교-교육활동가, 마을교육활동가
- 다. 도시재생-코디네이터 도시재생활동가 주민조사단
- 라. 커뮤니티전문가
- 마. 문화예술-문화마을활동가 문화예술활동가

주관부서들이 서로 다르고 내용에 따라 마을활동가라는 명칭을 부여함으로 용어상 충돌이 발
생하여 실제로 공동체에서 마을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대한 혼란이 온다.
담당 부서의 역할에 따라 교육지원단 문화예술 지원단 건축지원단 등의 이름으로 명확한 역할
분담에 따른 명칭 구분이 필요하다.

6. 마을공동체는 활동가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의 터전

좋은 토양에서 건강한 식물이 자라듯 마을활동가의 활동력 확산의 기본터전인 공동체가 있어
야 한다. 지속가능한 활동력을 보장하고 조례 등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동의 생태계를 지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 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여건 조성
 - 1) 거점의 필요성
 - 2)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일
 - 3) 주민활동의 조력자 등 기본적인 생태계를 갖추는 일

- 나. 조례를 통한 정책지원으로 활동가들의 기본권 보장

- 1) 주민자치회의 조직 속에 활동가 당연직으로 배치
- 2) 활동가 협의체 구성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
- 3) 교육과정이 표준화된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 양성
- 4)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 활동비 지원

7. 인천마을센터와 중간지원 조직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

인천광역시에는 각 구마다 중간지원조직들이 설립되면서 그동안 시나 인천마을센터가 직접 했던 공모사업이라든지 활동가 관리 등은 이제 중간지원 조직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인천마을센터는 중간지원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리고 상호 협조체계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그 목표를 두고 활동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위탁기관인 인천마을센터와 각 구의 조직의 일원인 중간지원조직과는 다소 운영의 기본 성격은 다르지만 공동체 지원과 활성화 그리고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역할 만큼은 분명히 함께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인천마을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활동가 역량 강화 등의 목표를 함께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 가. 인천마을센터와 중간지원 조직의 업무 지원체계 확립
- 나. 중간지원조직을 위한 활동가 양성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다. 공동체 공모 등의 사업에 관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이관
- 라. 인천마을센터와 중간지원조직의 공통업무의 축소
- 마. 인천마을센터와 중간지원조직간 T/F 구성으로 활동계획 수립

Ⅲ. 맺으며

토론을 맺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영역의 의견들이 모여져 마을활동의 사회적가치와 인정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여 조직간 긴밀한 협조와 활발한 마을활동이 이루어지고, 특히 마을활동가들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보상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이끄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1. 마을활동가 입지의 중요성
2. 마을활동가 조직 구조와 운영 기준의 다름
3. 마을활동가 양성 방법의 표준화 필요
4. 마을활동가 보상제 필요
5. 마을활동가 명칭의 용어 정의 필요
6. 마을공동체는 활동가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의 터전
7. 인천마을센터와 중간지원 조직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

[토론문]

「 더 나은 세상이란 사람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이다. 」

김원진 (인천시 서구 마을활동가)

마을활동이 소통의 장이 되고, 주민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고 있음을 본다. 이제 마을단위의 공동체 활동은 단순한 만남의 즐거움을 넘어, 시민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새로운 관계와 문화 정치시스템을 형성하여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여러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솔루션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마을활동은 초기에는 본인들의 수요(Demand)와 필요(Need)에 의해서 생겨난다. 인천시만 해도 약 900여개에 가까운 마을공동체와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이 존재한다. 아마 통계에 잡히지 않은(공식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활동가를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수일 것이다. 이 분들이 비록 본인들의 필요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지역의 과제를 주체적으로 찾고 해결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은 결국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로써 그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러한 활동과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의 부재(absence) 혹은 결여(lack)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써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크게는 마을활동을 하는 공동체와 그 안의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좁게는 일부 행정에서 선정하여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들까지 고려하여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상 마을활동이나 활동가의 인정체계를 이야기할 때, 조악한 보상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행정에서 마을활동가의 개념을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가에 대해서 담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나마 일반적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마을 활동가 혹은 유사개념의 활동가를 직접 위촉하는 경우에도 월 60만 원의 수당만도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분 단위로 증빙하여 최저 임금 수준 혹은 그에 비슷한 수준으로 청구하는 형태로 활동가를 처우하는 것이 현재의 활동가들에 대한 인정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마을활동과 활동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인정체계’라고 보기 어렵다. 어설픈 지급체계를 적용한 마을활동 지원사업은 많은 활동가들에게 좌

절감과 모델감을 안겨줄 뿐이다.

단순히 예산상의 '절대금액'이 적어서가 아니다. 일단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이라는 그 이름하에 벌어지고 있는 활동에서 '사람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진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활동가'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는가? 그들을 공공성 실현의 주체로 인정한다면, 어떤 지원을 이 사업계획에 담아야겠는가? 선정된 마을활동가에 대한 지원은 또 어떠한가? 그들과 어떻게 잘 협력하여 더 큰 일을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닌 그저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을활동가들이 원하는 사회적 인정과 지금 행정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방식은 그 간극을 도저히 좁혀 보기 힘들다고 느껴진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에서 우후죽순처럼 유사한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결과물로 이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을까?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공적 예산이 늘어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다만 애초에 사업을 설계할 때에, "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가?", "누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혹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에 대한 즉, 사람에 대한 고민과 고찰이 결여된 안일한 사업계획과 추진은, 안 하니만 못한 사업으로 현장과 행정 모두에게 상처로만 남아질 수 있다.

마을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를 이야기 할 때, 앞 선 발제문에서 두 전문가 분들은 '마을공동체 활동은 그 시작에 수익 및 경제적 보상이 가장 우선되는 목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활동가들이 원하는 것은 최저 임금 혹은 그에 준하는 돈 몇 푼이 아니다.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은 어설픈 수당 지급이 아닌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인정을 포함한다. 또한, 마을 활동과 활동가들에 대한 전문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해 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들을 양성하는 방식에서 부터 그들의 가치와 활동을 인정하는 것까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인정 체계는 마을활동과 활동가들을 필요로 하는 공공부문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연하면서도 납득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인정체계를 설계할 때 일방적인 제안이 아닌 그 보상의 주체가 되는 활동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활성화의 취지나 분명한 이해 없이, 주먹구구식의 활성화 사업 도입과 예산 편성은 오히려 예산 낭비에 가깝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의 계획 및 공동체 사업의 확장을 어렵게 한다. 이전의 체계와 구조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발전도 이뤄내기 어렵다. 마을활동의 시작은 순수함과 열정이 맞다. 이러한 많은 활동가들이 이뤄놓은 것들, 그들의 땀과 희망으로 얻어진 경험과 능력 그리고 소중한 결과들이 제대로 인정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끝.

[토론문]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완주의 사례

이근석(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1. 마을공동체 발굴-육성-자립 단계에서 지원 필요성 대두

2013년 시범 사업으로 광역사무장 제도 도입. 1인이 4-5개 마을 관리 및 지원
귀농인으로 전문성 활용.

Haccp, 인사노무, 홍보마케팅, 식품위생, 체험개발, 위생, 갈등관리 등
중간지원조직과 사업과 연계

2. 농촌의 현실

고령화, 과소화로 공동체 사업의 행정적 지원 필요

상근 근무 형식이 아닌 자율적 근무 형식.

근무의 탄력성으로 자기 사업(농사) 겸업

최저 임금 수준으로 지원

3. 행정 체계

광역사무장 전담 행정직 배정. 월례회 진행

매년 마을 배정. 신규 마을과 요청마을, 취약마을 협의

매년 담당 마을 뿐 아니라 기존 마을사업 전수 조사. 행정도 함께

4. 현재

6명으로 구성

마을 단위로 배정보다는 분야별 배정에 대한 논의

퇴직금 조성

영역별 워크숍, 학습 기회 제공.

지속적인 역량강화 실시

기존 마을 사무장들과 월례회의로 다른 마을공동체 사업 공유

농어촌 사업의 컨설턴트로 발전 기대

[토론문]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손민호(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토론문]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박재성(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

1. 포괄적 보조금에 대한 의견

- 발제에서 논한 포괄적 보조금은 현재 법령상 금하고 있어 본질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함.

- 지방재정법 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2항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사무관리비 등)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반대로 법적근거를 다른 법령에 마련하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중인 마을공동체법에도 해당조항이 없음. 마을공동체법에 위 내용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재정법 32조의2,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2. 다양한 활동 인정에 대한 의견

- 4대보험으로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인정체계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2020년 계양구에서는 4대보험이 아닌 활동경력을 산출하는 서식을 마련해서 적용한 바 있음. (예. 의제활동기간 중 정기 분과회의 및 실질활동시간 등의 합계로 총 기여시간을 산출하고, 총 기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눠 경력일 기준으로 함)

- 발제에서 논한 것처럼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이라는 개념에서 인정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 주체에 따라 인정체계의 요구사항이 달라질 것임.

* (행정) 계양구 사례처럼 활동경력 인정에 대한 대안마련,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등에 역할이 있음.

* (민간) 마을공동체간 인정체계 구축을 위한 주체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됨. 지역화폐처럼 서로간의 활동을 인정하고, 인정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상이 필요함. 예를 들어 아직 실체화되진 않았지만 미추홀구에서는 새로 조성될 지역사회소통협력공간에 돌봄공간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공동체 활동의 인정시간을 돌봄공간 이용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